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보도자료

2025.10.21.(화)

피해자 권리보장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수립

담당자

대외협력과장 고영호(02-2650-1081), 담당자 이훈(02-2650-1085)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권고

- 이태원참사특조위, 참사 3주기 맞아 정부 권고 담은 성명서 의결
- 송기춘 위원장, 기자회견과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재확인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21일 제38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성명서를 의결했다.
-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았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의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은 송기춘 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 성명서 별첨
- 기자회견 후에는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주요 책임자 조사 및 처벌, 진상규명 및 원인 분석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가졌다. 송기춘 위원장은 “기억은 슬픔의 되풀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약속”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 기자회견 질의응답 별첨
- 한편, 위원회는 25일 3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 신청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7일에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진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9일 3주기 기억식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끝//

[별첨]

성명서 전문

3년 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참사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열정이 넘치던 거리는 순식간에 참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은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고의 예방과 대비 단계는 물론 참사가 벌어지던 당시와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국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사에 책임지려는 공직자가 없었고, 공직자 누구도 제대로 질책받지도 않았습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와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가 회피한 책임을 묻기 위해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들이 나서야 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이들이 혹서와 혹한, 폭우와 폭설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오열과 분투 속에 참사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서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가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염원했던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조

사위원회는 시행령과 규칙 제정, 조직 구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갖추고 2025년 6월 17일 조사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였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한 120여 회 이상의 참고인조사, 국정조사보고서, 수사 및 재판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조사 방법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참사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실제적 진실을 명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고자 중단 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태원참사 3주기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어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는 지금,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도 못했고, 후속 조치에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목표와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 기자회견 질의응답]

■ 질문 1

검경 합수팀 출범 이후 특조위와 조사적 범위가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특조위에서는 8월부터 매달 비공식 실무협의로 조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의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일단 각자 기관의 업무를 상대 기관에 소개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두 기관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의 수사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류를 이어가며 업무상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 2

이제 곧 3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 조사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답변 2

저희가 당초에는 중간 발표회를 3주기 즈음으로 예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내용은 그렇게 공표된 듯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80% 정도의 수준이라, 그대로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3주기에 맞춘 행사보다는 완결성이 갖춰졌을 때 내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발표할 예정이니, 그 부분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3

그동안 여러 자료를 확보하셨을 텐데, 국정조사 자료도 있고 검찰·경찰·법원 자료 등 여러 자료가 있을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기관의 미협조 등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3

국가기관의 자료는 대부분 협조를 받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 송부받는 상태이며, 다른 국가기관의 비협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련 부분 중 비서실 쪽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답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협조를 잘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질문 4

위원장님께서 지난주 국감 때 “공직자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나 당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윗선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4

조사대상에 한계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참사와 관련된 결정이나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고, 일단 실무자·과장선의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상급 기관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조사를 이어가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 이상민 장관 등 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을 적게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큰 결정권을 가진다면, 오히려 하급자보다 상급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더 강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5

지금까지 받은 통계자료를 보면, 희생자는 직권조사가 많고 피해자는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5

피해자 지원을 제공했던 국가기관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49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가해나 평가가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사를 드러내기를 주저하거나,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참사의 피해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오히려 치유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지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한 태도 자체가 치유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단순히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직권조사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입니다.

■ 질문 6

조사개시 때도 여쭙봤는데요. 피해자 구조의 골든타임 조사, 즉 구조활동이 더 빨랐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6

당시 희생자분들을 중심으로 행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디서 연락을 받고, 이태원역에 내려 어느 골목으로 이동했는지, 인파에 휩쓸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후 어떤 처치를 받고 어떤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동 등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든타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수 사례에서 구조·처치의 시기와 내용에 따른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질문 7

특조위가 여러 재판 중지를 요청했는데, 김광호·박희영·이임재 재판은 중지됐지만 파출소 순찰팀장 관련 재판에는 요청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 질문7 답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질문 7에 이은 답변

그 재판에서 나온 증언 중에는 현장에서 인원 부족을 보고했지만 용산경찰서가 무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무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조위의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봤습니다.

■ 질문 8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 지난 회의 과정에서 공무원 분들 중에 구조 과정에 참여를 하셨다가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자나 희생자 인정 과정에 대해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조위에서 논의를 하셨는지, 논의를 하셨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쭙보겠습니다.

둘째, 불송치·불기소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답변 8

희생자 범주에 포함해야 할 부분으로 최근 소방청 공무원 두 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직무 수행 중 구조에 참여한 분들은 피해자로는 보지 않지만, 희생자 정의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희생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방청의 지원과 유가족 의사를 종합해 정식 희생자 등록 및 별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불송치·불기소 자료는 분석 중이며, 의미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신중히 검토 후 발표하려 합니다. 기존 평가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질문 9

유가족분들이 최근 2차 가해자들을 고소했는데, 특조위에서 이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9

저희 위원회 피해자권리보장과에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실태와 위험을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해 공포 및 권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2차 가해 사건들은 경찰 전담팀에서 수사 중으로, 개별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10

특조위가 외국인 유가족들을 직접 해외에서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 정부 때는

외교부가 상호주의를 내세워 거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외교부의 대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10

이번에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구조참여자 조사, 스리랑카는 희생자 유족 조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조사에 있어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으나, 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가족을 국내에 초청해 현장을 함께 보고 위로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며, 위원회는 이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별 조사보고서 및 결정문을 작성 중입니다.

■ 질문 11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장례비 지원만 하고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외교부의 외국인 유가족 대응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조사 중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1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담당 조사관이 외교부 공무원의 대응 부족이나 조치 내용을 조사 결과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12

성명 관련 질문입니다. 성명문에서 “정권 교체나 새 정부 구성으로 국가책임이 사라질 수 없다. 사과와 후속조치,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2

우리가 경험한 나쁜 사례 중 하나가 참사의 정쟁화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잘못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또 이 참사가 더 풀기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책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던 데 있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말만 있었다더라도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단지 “미안하다”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안전을 향한 길로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제도적 개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질문 13

혹시 아까 말씀하신 중간발표가 올해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답변 13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충분한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14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했다고 하셨는데, 조사 과정에서 인력 부족이나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4

조사를 하다 보면 인력 부족을 느낄 때가 많지만, 저희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주어진 범위와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간과 권한 안에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